

제317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7월10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

심사된 안건

- 1.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 4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최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기록원 제출……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예.

○정진후 위원 지금 의안 상정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최경환 예, 이것 해 놓고 하시지요.

○정진후 위원 의안 상정 전에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아, 그래요? 예, 말씀하세요.

○정진후 위원 존재감이 없는 비교집단체에 참여하는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오늘 논의나 앞으로의 논의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안의 내용 자체가, 오늘 부의될 의안의 내용 자체가 워낙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당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이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몇 말씀을 좀 드려야겠기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와 제가 속해 있는 진보정의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들춰 봐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심대하게 넘어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향후에 면책특권과 관련된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여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접하면서 삼국유사 설화편에 나오는 경문왕과 복두장의 설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하는 설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이고 취지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공개되는 내용이 공개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열람하신 위원들께서 운영위를 통해서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공개한다, 최소한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은 직후에라도 본회의장 같은 곳에서 공개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뭘 근거로 해서 이후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양당이 열람을 해서 한다고 해서 NLL과 관련된 발언에 대한 해석에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견은 존재할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8일 날 실시했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과반수를 넘어서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기록물 열람은 잘못된 것이고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복수의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6월 26일 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3%의 국민들이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이후에도 그렇게 의견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6월 27일자입니다, 63.7%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64.2%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7월 8일 날 있었던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의결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응답이 51.4%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의해서 오늘 운영위에 이 안건이 상정되었고, 급기야는 운영위 보고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통해서 공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위키리크스가 밝혔던 대로 전 대통령이 한일회담에서 영토 주권과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 발언, 한미 정상회담에서 건강 주권과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 발언, 모두가 다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NLL만이 영토의 문제이고 독도에 관련된 문제는 영토의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궁금해하고 또 공분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까지 우리는 정상회담과 관련된 대화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왔고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대신 개입 문제로부터 촉발된 이 문제가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국정원에 대한 해체를 포

함한 대수술을 감행한 이후에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흙탕물이 된 것을 다른 물로써 씻어내기보다는 걸레로 닦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청소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고 교섭단체만이 열람하는 이것은 역시 국민의 대표권을 저는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발린 공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개의 문제가 의제에서 빠져야 된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경환 예, 윤상현 위원!

○윤상현 위원 존경하는 정진후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로서 비교섭단체 권한이나 역할을 훼손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열람, 하다 보니까 책임 있는 교섭단체 간에 이렇게 합의문을 내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과거의 예를 보니까 2007년도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때도 세 분, 세 분이 열람을 했는데 그때도 비교섭단체 분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례를 찾아서 이렇게 한 것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국가기록원 자료에 대한 열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참 상황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열람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어디서부터 촉발되었느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 29일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의 성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10·4 선언, 저희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10·4 선언에 대해서 NLL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당시 10·4 선언은 NLL의 무법성,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 당시의 박근혜 후보가 NLL 문제를 같이 거론하면서 NLL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10·4 선언 존중 운운하는 것은 북남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계속 도발적인 공격을 하면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정문헌 의원이 그것을 파 집고 들어가서 현재의 경위까지 이르렀다 해서 결국 NLL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 또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그 대화록,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또 조작된 건지 그것을 확실히 살펴야 이 논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해서 국론 분열을 막고 또 NLL로 인해서 야기된 정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고뇌에 찬 결심을 하게 됐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진후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진후 위원 한 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환 짧게 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당이 열람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자체의 문제에 대한 반대를 그래서 맨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본회의에서, 최소한도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했던 본회의에서 이 사안이 결정된 것까지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할지라도 존중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이 문제를 열람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운영위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피셔서 의안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정진후 위원님의 여러 가지 고뇌에 차신 말씀 저희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공개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의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쟁의 대상으로 NLL 관련 문제들이 드러나 갖고 논쟁이 있었지만 정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 것은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하고 그 후에 이걸 더 등급을 낮춰 갖고 일반기록물로 만들어 놓고 만천하에 공개한 것 때문에 이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국정원이 국민들 앞에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일반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대화록과 동일한 대통령기록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

해 갖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NLL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들에 따른 국론분열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이게 선택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법안의 취지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열람하고 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야가 비밀누설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합의된 사항만을 팩트 위주로 공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면책특권은 저희는, 여야는 면책특권에 숨어서 비밀을 누설할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기록원에 보관된 문서와 국정원이 공개한 문서가 저희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정원이 완전히 새롭게 이걸 변조·위조 또는 변작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그럴 개연성은 매우 적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대화록입니다. 그런데 대화록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큰 차이가 없다고, 미리 예단하기 힘들지만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위조·변조·변작했다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 봐 갖고 만일 그런 사안들이 발견된다면 그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대화록은 공개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요청 요구안에 있는 것처럼 사전회의록 또는 보고서, 사후회의록 또는 보고서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들이라든가 기록물들의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 정상회담 간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화보다 더 비중 있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은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고 그 기록물에 있는 내용들만 해 갖고서, 대화록보다 사실 더 중한 사실이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양당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운영위원회에 보고 형식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저희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갖고, 아예 처음부터 공개되지 않은 문서를 공개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공개가 된 문서가 과연

기록원에 있는 것과 내용의 또는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갖고 정리해 갖고 더 이상 국론분열을 막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지책으로 또 국회의 합법적인 절차 과정을 통해 갖고 결정됐다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전해철 위원님, 발언 안 하셔도 되겠지요?

○**전해철 위원** 예.

○**위원장 최경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 논란과 여러 협의를 거쳐서 국론분열과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정말 헌법 개정만큼 어려운 절차인 재적 3분의 2 동의를 거쳐서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정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의 입법정신도 존중하면서 또 우리가 국론분열과 안보위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종식을 시키고 원만하게 이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고뇌에 찬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그렇게 넓게 헤량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진후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서)

위원장님, 국민들에 대한 여론의 말씀을 제가 익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의안을 상정하시겠다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퇴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 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

(11시26분)

○**위원장 최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여 본회의 의결로 국가기록원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자료가 국회에 기록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 이를 열

람하는 위원단을 구성하고 열람장소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거쳐 열람위원단 구성 범위 등을 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람위원단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각 5인, 총 10인으로 구성을 하고 열람장소는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하여 열람기간과 열람시간 등 자료 열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흠 위원**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논란을 종식시키고 또 이런 분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교육지책으로 이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 가지는 유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께서 지금 국정원에서 공개한 내용하고 별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된 내용을 갖고 해석 차이는 꼭 임진왜란 전에 일본 통신사를 보냈는데 서인과 동인의 얘기가 각기 다른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의혹을 더 증폭시킨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다섯 다섯이 들어가서 볼 때 이 부분이, 지도부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세부적인 그런 일정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증폭시키지 않고 국민들한테 의혹을 해소시키고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5명, 5명 양당만 들어갔을 때 또 해석 차이로 논란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치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환 또 혹시 다른……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다 같이 모두가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고 해서 어제 아마 양당 간사 간 합의에서 열람단에서 합의한 내용만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양당 간사께서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추가적인 보안 장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구를 해 주시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안 서약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보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 잘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소위에서 이야기를 아마 소위 구성돼서 하겠습니까마는 원칙과 관련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공개하고 열람하게 됐습니다마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의 내용은 일단 위법, 적법을 떠나 가지고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리고 사초와 사료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전문가나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양당 간사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실 것은 정말로 최소 공개를 한다, 그러니까 최소 열람과 최소 공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소위를 누가 하시든 간에 확실히 의견 일치를 봐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원칙을 정하면 기술적으로 결정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컨대 목록도 그래서 아마 합의할 때 하시겠지만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볼 게 아니라 목록 열람부터 최소 열람, 최소 공개 이런 원칙을 좀 지켜 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경환 예, 전적으로 다들 동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당 간사께서 진행을 하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을 하셔서 하시고, 국가기록원에 있는 관련 자료를 굉장히 많은 자료를 방대하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된 아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는 다 빼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목록 리스트만 우선 확인을 하고, 그중에서도 또 이 사안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이는 자료에 대해서만 최소한 열람을 하고 또 최소한 공개하는 그런 원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없으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기록원 제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건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안건이 가결됨에 즈음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열람하게 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 제출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열람하게 될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열람 내용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 법률의 규정 등을 감안하셔서 철저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그동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이 확산이 아니라 꼭 종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강은희	김성주	김태흠	김현
문정림	박민수	백군기	신동우
윤상현	윤재옥	이완영	이우현
이헌승	전해철	정성호	정진후
최경환	최동익		

○청가 위원(7인)

김진태	김한표	류지영	은수미
장하나	진성준	홍익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입법심의관	권영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 발의)

(2013. 7. 4 심재권 · 김성곤 · 전순옥 · 윤관석 · 전병헌 · 배기운 · 김광진 · 인재근 · 남인순 · 유기홍 · 유성엽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3. 7. 4 황주홍 · 조정대 · 김영록 · 이종걸 · 김춘진 · 이원욱 · 김태호 · 우윤근 · 주영순 · 안규백 · 최재성 · 문병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7월 5일 회부됨